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오년호 | 부연구위원
oh.n@krei.re.kr

김상효 | 연구위원
skim@krei.re.kr

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핀란드, 캐나다, 케냐를 중심으로

KEY MESSAGE

- 경제적 성과 외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었으며, 장기적 안정성과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

SUMMARY

- 경제적 불평등 심화, 기술 변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으로써 기본소득 논의 확대
- 해외사례는 삶의 질, 심리적 안정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입증했으며,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의 중요성 강조
- 비경제적 성과 지표를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 성과 지표로 포함하고, 투명한 재원 모델과 법적 근거 마련 필요

01 국내 기본소득 논의 배경 및 경과



인구구조·노동시장·기술 변화의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필요

| 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불안정한 노동시장

-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자산 불평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제적 취약성이 나타남. 이에 따라, 포괄적인 소득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급격한 기술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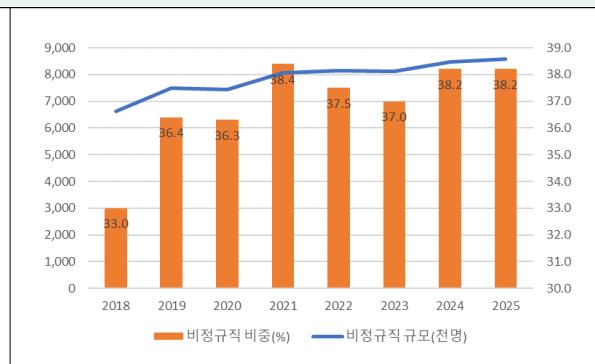
-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일부 직무가 대체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고용 기반 소득 보장만으로는 안정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음.
- 한편, 농어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소멸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 유지와 정주 의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이 정책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그림 1〉 순자산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2〉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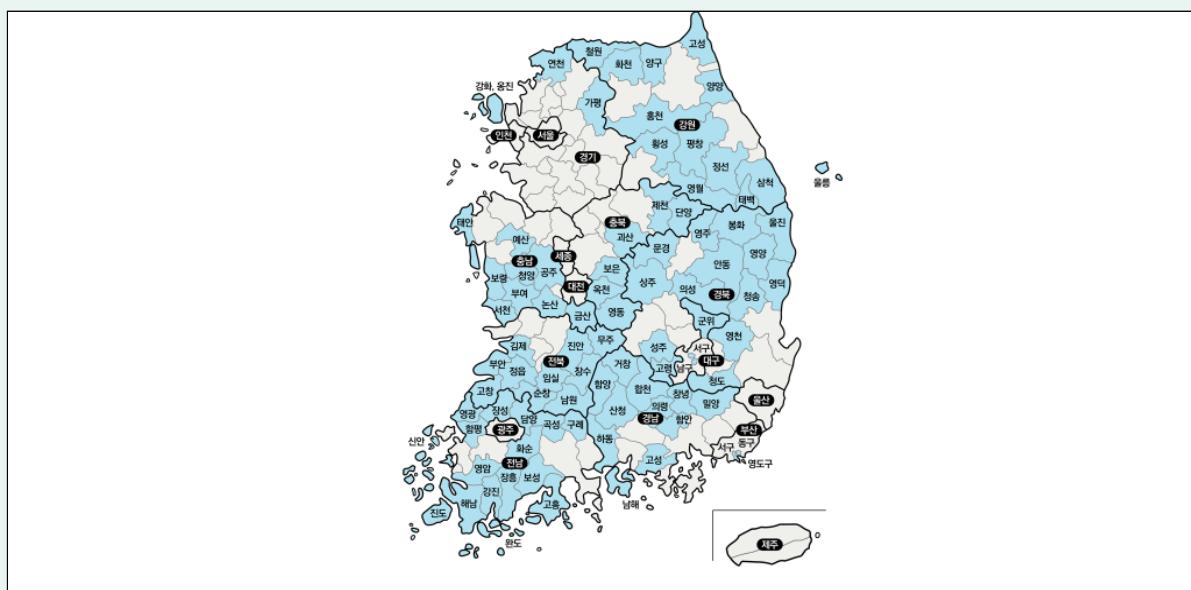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해소

- 2023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상 발굴된 대상자는 약 141만 명이었으나, 이 중 조치 완료된 대상자는 48.5%(68만 명)로 나타남.¹⁾ 현행 복지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 자산 기준, 부양의무자 요건 등으로 인해 제도 접근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배제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기본소득은 보편적·무조건적 지급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복지체계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평가됨.

〈그림 3〉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인구감소지역 지정,

검색일: 2025. 11. 20.

1) 최정은·민소영·김민우(2024),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비대상자 실태분석과 정책 제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확장

| 서울시 디딤돌소득: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형 소득 실험

- 디딤돌소득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임.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²⁾이면서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의 50%를 디딤돌소득으로 지원함.
- 해당 사업은 빈곤 퇴치 및 근로 유인 변화 등의 효과 분석을 위해 설계됨. 지난 8월 발표된 연구³⁾에 따르면 수혜 가구는 총소득과 지출이 증가했으나, 대조군 대비 고용 및 근로소득은 낮았고 정신 건강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대상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시행됨.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함.
- 주요 목적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정착 유도 등이며, 정책 효과 분석 결과 주당 노동 시간 증가 및 소비 진작 효과와 청년들의 미래 희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⁴⁾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농어민 개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 농어민기회소득은 2021년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을 확장하여 농어민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2024년부터 시행됨.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
-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여성 농민 등 소외 계층 권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며,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특징임.

²⁾ 2023년도 2단계 시범사업 기준.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함.

³⁾ Lee et al. (2025), The Impacts of Negative Income Tax on Labor Market and Health Outcomes: Evidence from a Large Scale Field Experiment, ESWC2025.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 국내 최초의 농촌 단위 기본소득 실험

- 청산면 시범사업은 농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험으로 2021년부터 추진함. 2022년 1월부터 청산면 주민 ('25년 기준) 3,629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주요 목적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내 소비 촉진, 인구 유출 방지, 공동체 결속 강화 등이며, 중간평가 결과, 주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마을 공동체 활동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됨.

| 중앙정부 시범사업: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실험 단계 진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10개 군⁵⁾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 을 선정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해당 군에 실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앞으로 2년간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 소득 보전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삶의 질 향상·공동체 복원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실험으로 기획됨.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급 체계, 재원 분담, 행정 절차, 성과 평가 등 제도화에 필요한 기초 모델을 구축할 예정임.

|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본 연구는 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외 기본소득 실험은 대부분 생활 안정, 빈곤 완화, 공동체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핀란드, 캐나다, 케냐 등의 사례는 정책 설계와 평가 체계 구축에 유용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유영성 외(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정책연구, 2020-78: 1-244.

5) '25년 10월 2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7곳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으로 선정하고 발표하였으나, '25년 12월 3일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을 추가하여 10곳으로 늘림.

02 기본소득 관련 해외사례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 및 논의

| 전 세계적으로 203개의 크고 작은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음.⁶⁾

- 초창기 실험은 1960~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⁷⁾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음. 1980~2010년대 중반에는 브라질, 인도, 나미비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무)조건부 현금 이전((Un)conditional Cash Transfer)⁸⁾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자동화, 고령화, 복잡한 복지 시스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핀란드, 캐나다, 미국 등)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케냐, 브라질, 인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실험이 시작되었음.
- 본 연구는 핀란드(2017~2018년), 캐나다 온타리오주(州)(2017~2019년), 케냐(2017~2029년) 기본소득 실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함. 이 세 사례는 실험의 배경, 환경, 재정 모델,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는 한국의 향후 정책 설계 및 시범사업 평가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표 1〉 핀란드·캐나다·케냐 기본소득 실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케냐
기간	2년	15개월	12년(진행 중)
대상	실업자 2,000명	저소득층 6,500명	농촌 주민 20,000명
실험 설계	개인 수준 무작위 통제실험	일부 지역 선정	마을 단위 무작위 통제실험
지급액	월 560유로	연 최대 16,989(캐나다)달러	월 22.50(美)달러
주요성과	정신건강 개선 고용효과 미미	정신건강 개선 주거 안정성 증가 노동시장 참여 질적 변화	기업 수 증가 노동 형태 전환 (임금→자영업)

6) 스탠퍼드 기본소득 연구소(Stanford Basic Income Lab).

7) 캐나다 매니토바주(州) 민컴(Mincome), 미국 뉴저지주(州)·시애틀·덴버·인디애나주(州) 게리 지역 소득 유지 실험, 아이오와주(州)·노스캐롤라이나주(州) 농촌 소득 유지 실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2018년)

| 복지체계 단순화와 고용 유인 검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실험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실시된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무작위 통제실험(Randomised Field Experiment)으로, 시필라(Juha Sipilä) 내각이 2015~2019년 국정운영의 핵심 전략목표로 제시한 ‘고객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환’과 ‘정책 실험을 통한 제도 혁신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당시 핀란드는 1990년대 경제 침체 이후 지속된 구조적 실업과 복잡한 사회보장체계 문제에 직면해 있었음. 복잡한 급여조합과 행정적 절차는 근로 유인을 저하시켜, 단기·비정형 고용과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음. 이에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보장의 포용성과 단순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음.
- 사전 검토 단계에서 총리실은 전면적 기본소득, 부분적 기본소득,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등의 대안을 비교·분석하고, 제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부분적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모델을 선택하였음.⁸⁾ 2016년 12월 제정된 「기본소득 실험법(Act on the Basic Income Experiment)」에 근거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

| 과학적 설계와 전국 단위 표본 구성

- 실험 대상은 2016년 11월 기준으로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함. 통제집단은 동일 조건의 173,000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전국 단위에서 지역적 편향 없이 표본을 구성하였음.
- 실험군은 매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은 당시 기초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 및 노동시장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의 실수령액과 동일하게 설정됨. 중요한 점은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실업급여 체계에서 나타난 일 할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설계였음.

8) 조건부 현금 이전은 정부가 빈곤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되, 특정 조건을 이행해야만 지원하는 제도. 주로 아동의 학교 출석이나 예방 접종 등을 조건으로 하며, 교육 및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가 있음.

9) 이는 전 국민이 아닌 실업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지급액도 기존 기초실업수당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구별됨.

- 실험의 평가체계는 사회보험청(Kela)이 총괄하였으며, 경제연구기관과 학계, 민간 싱크탱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평가는 행정자료(세무청·연금청·사회보험청 지급기록), 설문조사(전화 인터뷰 7,000여 명 대상, 응답률 23.2%),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는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짐.

| 고용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삶의 질·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뚜렷¹⁰⁾

-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실험군의 연평균 고용 일수는 78일로 통제군(73일)보다 5일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또한, 2018년 일정 기간 내 근로 시간을 채우거나 구직활동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삭감되는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으로 인한 순수한 고용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고용 외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됨. 실험군은 통제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정신적 안정감, 제도 신뢰도 등이 높았음.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통제군(37%)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급여의 안정성과 행정 절차의 단순화가 생활 전반의 안정감을 높인 결과로 평가됨.

| 복지급여 수급 구조의 단순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¹¹⁾

- 기본소득 실험군은 통제군에 비해 실업급여 수령액이 평균 1,415유로로 적고, 사회보조금(Social Assistance) 수령액도 평균 400유로로 낮게 나타남. 이는 기본소득이 기존 실업급여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복지급여 간 중복을 완화하여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인 결과로 해석됨.
- 하지만, 기본소득이 기존 실업급여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실업급여에 포함된 아동 가산(Child Increase) 등 부가 혜택을 받기 위해 여전히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했음. 이로 인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행정 간소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주거보조금과 질병수당 등 기타 목적성 급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음.

¹⁰⁾ Kangas, O., S. Jauhainen, M. Simanainen & M. Ylikännö(2019),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¹¹⁾ Kangas, O., S. Jauhainen, M. Simanainen & M. Ylikännö(2019),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기본소득 실험(2017~2019년)

| 복지제도 단순화와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 북미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

-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복잡한 복지체계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수급자 낙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온타리오 기본소득 시범사업(Ontario Basic Income Pilot: OBIP)’을 실시하였음. 시범사업 기획은 휴 세갈(Hugh Segal)이 작성한 정책 권고서 ‘Finding a Better Way(2016)¹²⁾’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잡한 복지제도의 일부를 단일 현금 급여로 대체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 실험은 3개 지역(해밀턴(Hamilton), 브랜트퍼드(Brantford), 브랜트카운티(Brant County), 선더베이(Thunder Bay), 린지(Lindsay))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6,500명이 참여함.¹³⁾ 이는 당시 북미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 중 가장 큰 규모로, 해밀턴과 선더베이는 도시형 지역, 린지는 농촌형 지역으로 설계됨. 특히, 린지는 인구 20,000명 규모의 중소도시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화 지역(Saturation Site)’을 목표로 설계되었음. 다만 실제 참여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한 1,800명 수준에 머물러 지역 전체를 포함하지 못함. 참여자는 복지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 비율은 54%, 평균 연령은 48세였음.
- 기본소득은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 기준선(Low-Income Measure: LIM)의 75%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단독 성인은 연 16,989(캐나다)달러, 부부는 연 24,027달러를 지급받았고, 장애인은 매월 500달러(연 6,0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50%의 소득공제율(tax-back rate)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소득의 절반은 유지되는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구조로 설계되었음. 이는 ‘일하면 손해 보는 복지 구조’를 해소하고 근로와 소득 보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음.
- 복잡한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조 프로그램(Ontario Works,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지원은 중단되었으나, 아동수당과 약품 지원 등 일부 목적성 급여는 유지되었음. 지급은 주정부가 매월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수급자별 자격 심사나 근로 보고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음.

¹²⁾ Hugh D Segal(2016), Finding a Better Way: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Ontario.

¹³⁾ 스탠퍼드 기본소득 연구소(Stanford Basic Income Lab).

| 조기 중단에도 불구하고 질적 복지 개선 효과 입증

- 실험은 3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주정부 교체(진보보수당 Doug Ford 집권)로 인해 사업은 약 15개월 만에 조기 종료되었음. 새로운 정부는 기본소득 효과의 불확실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으로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획되었던 3년간의 정량적 분석은 완료되지 못했음.
- 짧은 실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감소, 정신건강 및 식량안전성 개선, 주거 안정성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수혜자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낙인과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함.¹⁴⁾
- 단기적인 고용률의 급격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음. 일부 수혜자는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그만두고 교육 및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의 질적인 변화를 시도함.¹⁵⁾

| ‘포화 지역(Saturation Site)’의 부재로 인한 실험의 구조적 한계¹⁶⁾

- 온타리오주(州) 기본소득 실험은 실험 지역 설계 당시 ‘포화 지역¹⁷⁾’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자격 기준 내 일부 주민만이 참여함에 따라 지역 전체의 소비 진작 효과나 공동체 응집력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복잡한 기존 복지 프로그램(Ontario Works¹⁸⁾,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¹⁹⁾ 등을 단일 급여로 대체하여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나, 일부 수혜자는 기본소득 대신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써 완전한 제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¹⁴⁾ Hamilton, L., & J. P. Mulvale(2019), “Human again: The (unrealized) promise of basic income in Ontario”, Journal of Poverty, 23(7): 576–599.

¹⁵⁾ Ferdosi, M., T. McDowell, W. Lewchuk & S. Ross(2020), Southern Ontario’s basic income experience.

¹⁶⁾ Mendelson, M., & Mendelson(2019), Lessons from Ontario’s Basic Income Pilot, Toronto: Maytree.

¹⁷⁾ 마을 혹은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원이 실험에 편입된 지역을 뜻함. 지역 단위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용이함.

¹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과 함께 근로 의무 부과를 하는 사회 보조 프로그램.

¹⁹⁾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 보조 프로그램.

케냐 GiveDirectly 기본소득 실험(2017~2029년 예정)

| 세계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기본소득 실험

-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은 빈곤 퇴치를 위한 현금 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GiveDirectly가 주도함. 이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12년) 기본소득 실험으로, 무조건 부 현금 이전(Unconditional Cash Transfer: UCT)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단순한 빈곤 퇴치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추정하고자 함.
- 실험은 서부 케냐의 295개 마을, 약 20,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마을 수준에서 무작위 통제 실험(RCT) 방식으로 네 가지 지급 모델이 설계되었으며, (1) 12년 장기 소규모 지급 그룹(매월 22.50달러), (2) 2년 단기 소규모 지급 그룹(매월 22.50달러), (3) 단기 일시불 지급 그룹(500달러), (4) 통제 그룹 등으로 구성됨.
- 또한, 선택된 마을의 모든 성인에게 지급하는 ‘포화 지역’ 모델을 적용하여, 개인의 변화를 넘어 지역 경제의 총수요 증가, 가격 변동, 사회적 자본 변화 등 일반 균형 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s)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단기 경제 활동 및 구조적 변화(2년 시점)²⁰⁾

- 기본소득 지급 후 12년 장기 지급 그룹과 일시금 지급 그룹에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총수입, 비용, 순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등 경제 확장이 일어남.
- 전체적인 노동 공급 시간은 변하지 않았으나, 수혜자들은 임금 노동에서 자영업/창업으로 노동의 형태를 전환함. 이는 수혜자들이 단순한 휴식 대신,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선택했음을 시사함.

구분	12년 장기 지급	2년 단기 지급	일시불 지급
기업 수	14% 증가	변화 없음	20% 증가
임금노동시간	9.7% 감소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농업부문 자영업노동시간	변화 없음	7.4% 증가	변화 없음
비농업부문 자영업노동시간	18.3% 증가	17.4% 증가	변화 없음

주: ‘변화 없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Banerjee et al.(2020)의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함.

20) Banerjee, A., M. Faye, A. Krueger, P. Niehaus & T. Suri(2023), Universal Basic Income: Short-Term Results from a Long-Term Experiment in Kenya.

- 또한, 일시불 지급 그룹은 단기 지급 그룹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보였음. 이는 투자를 위한 초기 자본금의 용이성이 중요하거나, 장기 그룹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경제적 성장을 견인했음을 시사함.

| 건강 개선과 심리적 제약 완화 효과

- 3개의 쳐치 그룹 모두에서 우울증 감소가 관찰되었음. 다만, 일시불 지급 그룹의 우울증 감소 효과가 다른 그룹에 비해 특히 작았는데, 이는 일시불로 지급된 돈이 수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으로 보임.²¹⁾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수혜자들은 통제군 대비 기아증가 폭이 더 작았고, 병원 방문이 감소하는 등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도 나타남.²²⁾

21) Banerjee, A., M. Faye, A. Krueger, P. Niehaus & T. Suri(2023), Universal Basic Income: Short-Term Results from a Long-Term Experiment in Kenya.

22) Banerjee, A., M. Faye, A. Krueger, P. Niehaus & T. Suri(2020),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03 시사점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 다차원적 영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 비경제적 성과 지표의 핵심화

- 기본소득 실험은 단순한 소득보조의 효과를 넘어, 생활 안정성과 심리적 안녕, 자립 역량 강화라는 다차원적 복지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핀란드 사례는 제도 단순화와 안정적 급여가 수혜자의 스트레스 완화, 삶의 만족도 향상, 제도 신뢰 회복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농어민의 소득 변동성과 행정 부담이 큰 국내 현실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함.
- 따라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수준의 개선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 기대감, 사회 참여율, 건강지표, 제도 접근성 등을 포함한 복합적 복지 성과를 측정해야 함. 또한, 연령·성별·직업 형태 등 집단별 차이를 고려하여, 기본소득이 단기 소비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행정 효율화·사회적 신뢰 회복 등 통합적 목표 설정

- 핀란드 사례는 기본소득이 복지급여 수급 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향후 기본소득 실험 설계 시 복지급여 중복 지급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를 측정해 볼 수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이가 복지제도 신뢰도, 행정비용 절감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기대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 필요

- 케냐의 장기 기본소득 실험은 현금 이전이 단기 소비 확대를 넘어 지역 내 자영업 증가, 소득 다변화, 고용 창출 등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줌. 특히 장기·예측 가능한 소득 안정성이 단기적 지원보다 지역의 투자 및 생산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률, 소상공인 매출, 공동체 사업 참여율, 주민 간 신뢰도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지 입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재정 승수 효과 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력을 검증해야 함.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 및 추진

|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급 중요

- 케냐 실험은 2년 단기 지급보다 일시불 지급 혹은 12년 장기 지급이 생산적 투자와 사업체 설립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일회성 자본 투입 혹은 예측 가능한 소득 안정성이 장기적 계획 수립과 위험 감수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대부분의 기본소득 관련 실험은 1~2년에 그쳐 장기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할 때,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지급 구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득 이전이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및 복지 서비스 구축 병행

- 한국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의료·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본소득 지급이 개인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기본소득과 함께 보건소, 작은도서관, 공동체 센터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발생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제도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온타리오주 실험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조기 종료를 경험함으로써, 제도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음. 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재원 구조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지방세 증대, 지역자원 수익 활용, 기본 복지 예산 절감분, 중앙정부 재정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현실적인 재원 모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감 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내용 문의 오년호 부연구위원 061-820-2268 oh.n@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43호

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핀란드, 캐나다, 케냐를 중심으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5. 12.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